



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

-재판절차-

2024. 11.

사법정책자문위원회

I. 대법원장 2차 부의 안건

1)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

II. 안건별 개요

1. 장애인 정책

가. 논의의 필요성

■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의 안착 및 내실화를 위한 예규 제정 필요

-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) 이행을 위해 2013년 「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」을 발간하고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제도를 도입함
- 그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사법지원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음 ⇨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를 인지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지침 마련 필요

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사법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

-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장애 유무 등 정보가 뒤늦게 확인되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,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발생 ⇨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지원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제



도 마련 필요

- 사법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에는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적 또는 보편적 기능저하도 포함(예: 임신, 고령) ⇨ 장애인뿐만 아니라, 고령자, 임산부 등의 불편을 고려한 사법지원체계 마련 필요

나. 주요 쟁점

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「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예규」(가칭) 제정

- 법원의 시설접근성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항
-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기준과 원칙
- 장애인 사법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조직체계와 연수·교육에 관한 사항
- 구체적인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절차(지체·뇌병변장애, 내부기관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발달장애, 정신장애 등)

■ 효과적인 사법지원을 위하여 공소장 등에 장애정보 표기 방안 검토

- 형사재판 개시 단계부터 적절한 사법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소장 등 법원에 최초 제출되는 서류에 장애 관련 정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

■ 기타 재판절차 및 민원업무에서의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과제 검토

-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 개선방안 검토
- 장애인인 피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 검토

다.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

■ 「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예규」(가칭)의 제정 방향 설정

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검토

- 공소장 등 서류 장애정보 표기 방안
-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 개선방안



- 장애인인 피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